

##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 ■ 유기농 우유 시장 성장세

유기농 우유가 출시 1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웰빙 트렌드와 환경보존을 중시하는 경향과 무엇보다 안전한 식품을 원하는 소비층이 늘고 있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지난 6월 15일 서울 세종대에서 한국유가공기술학회(회장 박해수)가 주최한 '친환경 유제품 개발과 소비전망' 심포지엄에서 김종수 농협중앙회 축산사료연구소 박사는 이같이 밝혔다.

금 박사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시장 가운데 유기농 축산물의 생산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급 우유의 성공 등에서 유기농 우유 시장 잠재력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뼈 포함 쇠고기 개방 지속 요구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6월 21일 aT센터에서 개최한 한·미FTA토론회에서는 미국무역장벽보고서 내용이 알려져 축산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이 뼈를 포함한 쇠고기, 기타 부위, 부산물 등의 모든 쇠고기를 수입토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과 가금육 수입에서도 지역주의 개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내용이 알려져 국내 축산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21일 aT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토론회'에서 권오복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한·미 FTA와 한국의 농수산업 관련 이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무역장벽

보고서 내용을 밝히고, 한·미 FTA를 통해 우리 농업부문은 얻는 것은 없고 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박사는 한·미 FTA로 축산물 생산이 3천3백80억원~9천31억원 정도 감소하고, 낙농제품의 경우 1백42억원~1천1백10억원 줄어든 것으로 예측하고, 축산물의 생산 감소율은 14.5%가 될 것임을 예상했다. 이중 특히 쇠고기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박사는 따라서 농축산업부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농축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철저한 국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권 박사는 특히 식량안보와 농가경제상 중요도가 높은 품목들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은 물론 관세 인하에 따라 수입이 급증, 국내 농축산물이 갑자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SG(긴급구제조치)는 반드시 도입해야 함을 역설했다. 권 박사는 국내적으로 FTA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직불제와 같은 농가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 '목장형유가공업' 허가대상 제외

자가 생산 원유를 직접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목장형유가공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5일부터 집유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의사인 자체검사원이나 의무검사원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가공처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

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 안에 따르면 목장형유가공업의 경우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일지 보관 기간을 단축하고, 검사 불합격 축산물을 비료의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유장의 자체검사원 결원시 총원기간도 연장했다.

또 HACCP 담당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등 HACCP 담당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가축사육단계 HACCP의 적용 대상·기준 및 절차·방법 등도 마련하고, 닭·오리고기의 포장 유통 의무화에 따른 포장 대상 축산물·영업자 및 포장유통의 방법 등을 정했다.

특히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파태료 상한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 ■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 내달중 발기인 모임

가축 사육부터 판매단계까지 HACCP도입에 따른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사단법인 축산물 HACCP 기준원(가칭)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2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축산물 HACCP기준원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8월까지 정관마련, 법인등기, 사무실임대, 직원채용 등을 마무리하고 9월 25일까지 HACCP 담당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에는 가축사육단체, 축산물생산관련단체, 기타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발기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사회는 총회회원 및 농림부 축산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장 등 축산기관의 장으로 구성하고 기준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해 총회에서 선임기로 했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내 설립지원팀을 설치하고 총회구성, 정관, 내부규정 마련 등의 업무를 지원기로 했다. 축산물 HACCP기준원은 사육부터 최종 판매까지 전 단계 HACCP도입으로 향후 적용대상이 7만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다.

### ■ 중대형 음식점 내년부터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

내년 1월부터 중·대형 갈비나 등심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6월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우선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토록 의무화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대상 쇠고기 표준메뉴는 생육 또는 양념육을 주재료로 해 조리·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이다. 이에 따라 불고기는 포함되나 구이류가 아닌 육회, 샤브샤브, 찜류(갈비찜), 탕류(갈비탕, 꼬리곰탕, 설렁탕)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젓소·육우를 구분해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명을 표시토록 했다. 단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 후 유통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팔호안에 식육의 종류와 수입국기명을 병행 표기토록 했다.

### ■ 2009년 쇠고기 이력추적 '의무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이 2008년 전면실시에 이어 2009년 모든 국내 쇠고기에 의무적용 되는 등 2009년 이후 개체 인식없는 소의 거래와 유통이 사실상 중단된다.

농림부는 소비자의 쇠고기안전성 중시 성향변영과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국내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같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2008년 전면실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발굴 및 보완을 위해 사업대상에 14개 브랜드 및 3개시(파

##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주, 김제, 김해) 등 지역단위도 포함해 총 11만두에 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와 지역단위 연계사업장(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음식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도별 3~4개와 2개소의 육우브랜드 등 총 50여개소를 사업에 참여시켜 총 40만두에 대한 개체인식 이표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이 전면 실시되는 2008년 하반기 이전까지 총 200만두를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2월부터 10월까지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사업추진방향 용역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소와 축협으로 이원화된 사업주관조직 정비와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 “도축세 없애야”, 김영덕 의원 개정안 제출

도축세 폐지가 본격 추진된다.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소, 돼지 등의 가축을 도축하는 경우에 한 해 시가의 1%를 특별징수하는 도축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축세가 주요 축산물 수출국가들 중 유일하게 한국의 소와 돼지 도살에서만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농가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2004년 지방세 34조2017억원 중 도축세는 445억원으로 0.13%에 불과하는 등 지방세 중 도축세 비중이 적어 폐지돼도 시군 피해는 미미한 반면 부과시에는 양돈농가는 연간 318만2000원, 한육우농가 47만4000원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 미 쇠고기 수입재개 늦어지나

미산 쇠고기 수입이 당초 7월경 재개될 것이라는 정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보유한 타이슨푸드, 카길 등의 메이저업체들은 지적사항이었던 30개월령 이상과 이하의 소를 동일한 작업 도구로 작업하는 등의 문제점 보안을 위한 시설공사로 예상보다 수입재개가 늦어질 것이다. 30개월령 이상과 이하의 소의 도축 및 가공작업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라인을 두 곳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시설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2년반만에 수입재개가 이 업체들이 제외된 채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선점, 뒤늦게 뛰어드는 메이저 업체들이 경쟁에서 뒤처질수도 있어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석 이후로 수입 재개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미산 쇠고기를 주로 취급해 온 경기지역 수입업체의 관계자는 “호주산 쇠고기가 나름대로 시장영역을 갖춘 상황에서는 시장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이저 업체들이 늦게 합류할 경우 경쟁에서 다소 처질 수 있어 이들의 요구에 의해 수입재개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업체는 문제점이 발견된 7개 작업장 중 한 곳에서 전량 받기로 계약을 했지만 이 작업장이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라인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수입재개가 추석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

도 제기되고 있고 우리도 전량 계약을 한 만큼 수입재개 시점이 늦어지는 편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 “뉴질랜드 암소 국내 반입 저지”, 한우와 외모 흡사 … 교잡·부정유통 우려 높아

한우농가들이 부정 유통이 우려되는 뉴질랜드산 암소 생우에 대해 적극 대처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 등 축산단체들은 지난 6월 20일 뉴질랜드 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뉴질랜드 암소 수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 생우 수입업자가 7월말경 암소 70여두를 포함 총 851두를 국내에 반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암소 수입은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 FTA 협상으로 위기에 몰린 한우농가들에게 한우유전자의 씨를 말리는 것으로 한우개량사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입 예정인 리무진 품종이 한우와 외모가 흡사해 암소가 수입될 경우 한우와의 교잡으로 생산된 송아지가 한우로 부정유통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남호경 회장은 “뉴질랜드산 암소 수출을 즉각 철회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대사관에 공식입장을 전달한 한우협회 등 축산업계는 향후 생우 수입실태조사로 입식 가능 농가 파악, 생우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사료업체 및 도축을 해주는 도축장과의 거래 중단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뉴질랜드 대사관은 “암소를 수출해도 법적인 장애가 없고 한국의 시장수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 거래는 민간의 상업적 거래로 양국간 규제조건 준수 여부 점검 외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한정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 감소주세의 축산발전기금, 대안은 없나

DDA(다자간 무역협상),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내 농업이 총체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여러 채널을 통해 나오면서 축산 농가들의 불안감은 시시각각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때만 해도 축산발전기금이 큰 버팀목이 되어 왔으나 최근들어 이마저도 급감돼 ‘허울뿐인 기금’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축산발전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출연금이 과도한 세금부과와 매출액 감소로 매년 급감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5년 기준 마사회가 납부한 지방세는 8248억원이나 농어촌사업재원은 1875억원으로 지방세의 22.7%에 불과하다. 지방세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및 주요 거점도시에 집중 납부돼 농어촌지역 재정기여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마사회가 납부한 지방세중 82%인 6759억원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반면 축산발전기금 재원의 96%를 담당하고 있는 마사회 출연금은 2002년 1834억원을 정점으로 2003년 1127억원, 2004년 816억원으로 매년 급감, 2005년에는 675억원에 불과하다.

농어민자녀장학사업 등 농어촌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규모도 2002년 458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돼 2005년에는 169억원에 그쳤다. 이같은 사실은 마사회출연금 축산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마사회 설립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다. 이에 따라 25개 농축산관련 단체로 구성된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익)는 최근 마권매출액에 부과되는 레저세 인하에 나섰다.

KRA는 레저세를 10%에서 5%로 인하해 고객환급금과 특별적립금을 높이면 매출액이 10% 증대돼 축산발전기금도 4배정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974년 마권세율을 20%로 인상해 그해 매출액이 23%나 감소했으나 이듬해 마권세율을 10%로 낮추자 매출액이 35%나 증가된 바 있다는 게 KRA측 설명이다.

##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현재 마권매출액은 고객환급금 72%, 발매세금 18%, 마사회 소득금 10%로 구성돼 있다. 발매세금 18%중 10%가 레저세, 6%는 지방교육세, 2%가 농어특별세로 이뤄져 있고 마사회 소득금 10%는 비용·법인세 7%, 이익금 3%로 구성돼 있다.

### ■ 2013년, 퇴·액비 사용 농경지 70만ha로

2013년까지 전체 농경지의 40%인 70만ha까지 퇴·액비 사용 농경지면적 확대를 골자로 한 자연순환농업대책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지난 6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경종과 축산이 연계한 자연순환농업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중점설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양질의 퇴·액비 생산 유도,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 등 주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 ■ 총채보리, 수확기 기상조건 악화로 생산량 감소 전망

농협이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총채보리 생산 사업이 극심한 일기 변화로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축산컨설팅부 사료사업지원단(단장 조용벽)에 따르면 총채보리 수확기인 지난달 말 전남·북 지역에 연이어 비가 내리면서 수확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번에 내린 비는 수확적기에 2~3일을 연달아 내린 데다 비온 직후 예년을 훨씬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수분 함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알곡마저 여물면서 사료로서의 이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따라 조사료 연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총채보리 생산은 현재 3만여톤에

이르고 있는 축산 농가 수요의 절반 수준인 1만5천톤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농협은 조사료 연합마케팅 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지난해 7천톤에 달했던 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대상작물도 생벼짚, 총채보리뿐만 아니라 호밀, 귀리,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사일리지 등 사료작물 전반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 ■ '구제역 자금' 상환기간 연장, 50% 이상 상환시 2년간

농림부는 2002년도 구제역과 콜레라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돼 6월부터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련, 대출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할 경우 2년간 상환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현재 소의 부르셀라, 양돈의 4P질병 등으로 가축 폐사율이 높고 해양투기감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로 고정투자비가 증가, 농가의 경영압박이 크다고 판단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성지역의 경우 387농가가 133억원의 자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5월 현재 대출 잔액이 약 230억원에 달해 농가들이 2년거쳐 3년분할 상환을 건의한 만큼 이번 조치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우리 농축산물 학교급식용 의무화

최근 대규모 급식사고가 발생하자 우리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차체에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확대 개

편, 생산부처에서 농축산물을 일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축산(수의) 및 식품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학교급식법을 개정, 국산 농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산 농축산물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도 품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치사건이후 이번 급식파동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 신설 추진과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식품안전 관리체계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원화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원칙에 따라 일관관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생산 단계가 빠진 안전관리 일원화는 반쪽 일원화로, 생산 단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개편하고, 그 외청으로 식품검역검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독일이라든가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농업식품부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식품안전관리 업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6월 26일 서울 팔래스호텔 튜올림룸에서 관련학계(6), 소비자단체(9), 수의·축산관련단체(13), 식품분야(1) 등으로 구성되는 '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최근의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한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 ■ 5개유형 교과서 개발 추진

'완전식품' 우유의 이해 증진을 위한 유치원·초·중·고교 대상 5개 유형 교과서가 개발 추진된다.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부장 박치봉)는 지난 6월 23

일 본관 회의실에서 '우유교육내용 상세화 및 교수학습자료개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책임자인 윤인경 교수(한국교원대)를 비롯한 연구팀 관계자들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등 생산자단체 관계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관련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윤인경 교수는 연구의 중점방향을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우유 영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교과서의 교육내용을 체계화 한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치봉 부장은 "앞으로 연구개발 될 우유관련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교육인적자원부 및 일선 학교 등에 배부해 학교 수업 시 활용하게 하는 한편 교과서집필, 심의·편수 관계자에게 송부, 교과서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또 "교사·학생·영양사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낙농현장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우유소비 확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유교육내용 상세화 및 교수학습자료개발 연구'는 학교 교육에서 우유교육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인쇄매체로서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학생들의 우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장기 학생의 우유의 소비확대 및 장기적인 우유소비기반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축산지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으며 올 11월까지 12개월간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공동연구진과 30명의 협의진이 수행하고 있다.

(자료발췌 : 한국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축산신문, 축산경제신문)